

# “우리 경제, 흔들리지 않도록”

### 홍남기 “지소미아 연장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종료 日 불확실성 상존... 내년 513조대 예산으로 대응 공공·기업·민자투자 총력... 운용계획 변경해 보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근거로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포도테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에의 차질 등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를 경제 외적 목적으로 흔들려 자원을 창의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그동안 세계를 분업 효율성으로 묶어 놓았던 글로벌 생산망(Global Value Chain)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협의를 나서고 하부밸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보완할 것 이란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 가동하고 있다”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주 2회 열고, 산업부 차관도 참석하도록 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그는 “대책이 결코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중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 양성·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며 “국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단호하고도 질서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

라며 “국민과 기업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회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그는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계획된 54조원 규모의 투자를 100% 집행하는 데 더해 노후 설비, 기반 시설 등 내년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올해 중 조기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의 경우 올해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해소 등 측면에서 지원하고, 민자 사업 역시 당초 계획(4조 2000억원)을 초과해 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전북도가 지난 23일 전주 효자동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및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북도 인권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 전북도, 인권관계자 회의 개최... 인권현안 이해·해결방안 모색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주 효자동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및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북도 인권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3기 전북도 인권위원회와 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및 인권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전라북도 인권관계자의 역할과 책무성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김

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이 ‘국가인권정책 추진방향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설명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도내 현장에서 인권약자의 인권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들이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다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인권현안을 제시하고 참석위원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행정기관 단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인권단체, 인권기관 등 기관·단체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내 인권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금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도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이황화 몰리브덴’으로 태양전지 효율성 UP

### KIST 전북분원, 유기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인 태양전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1세대 태양전지는 실리콘 기반의 무기반도체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제작과정이 복잡하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접거나 말 수 있는 ‘유기태양전지’이다. 하지만 유기태양전지는 효율성이 낮아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손동익 선임연구원, 이규승 박사과정, 박영재 박사 연구팀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는 물질인 ‘이황화 몰리브덴’을 활용하여 유기태양전지의 효율 증가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황화 몰리브덴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반도체 물질 중 하나로, 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연구팀은 높은 전자이동도를 갖는 이황화 몰리브덴을 유기태양전지의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하여 광전 변환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효율 증가에 대한 원리를 규명했다.

KIST 손동익 박사팀은 전지의 표면 위에 ‘이황화 몰리브덴 나노시트’를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하여 무유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진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증가시켰고, 이황화 몰리브덴 나노시트가 효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분해 형광분광법과 시뮬레이션 계산을 활용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전건협, 하도급 참여 확대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총력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라북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내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방지 등 건설관련 법령의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20여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은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된 바 있으며, 도내 2,5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함께하고 있다.

김태경 회장은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전문건설업체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에는 도내 14개 시, 군을 찾아 인, 허가 및 계약담당 부서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75개소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